

휴지조각된 1억짜리 부패평가

권익위-서울시 눈가리고 아웅

권익위 주관 서울시 부패방지시책평가 비공개 두 기관 정보공개청구에도 “공개 불가” 버티기



박은정(왼쪽 세번째)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 및 개선대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결과 수사 의뢰하거나 징계 문책 요구가 필요한 채용비리는 총 182건이 적발되었고 비리 혐의가 짙은 36건은 수사를 의뢰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18년도 서울시 부패방지 시책평가 세부내용이 비공개 처리됐다. 권익위와 서울시는 평가 내용을 알고 싶다는 시민의 목소리에도 귀를 닫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권익위는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2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실시하고 지난달 31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는 예산 1억2000여만원이 투입됐다.

부패방지 시책평가 각급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반부패 활동과 성과를 평가하는 제도다.

평가 결과 서울시는 전체 5등급 중 2번째로 부진한 등급인 4등급(2년 연속)을 받았다. 서울시는 기획재정부, 외교부, 세종시, 인천 남동구, 공주대, 대한체육회 등과 함께 2년 연속 반부패 업무 부족 기관으로 선정됐다.

다만 권익위가 발표한 자료에는 등급 부여 이유와 세부내용은 담겨 있지 않았다. 이에 뉴스가 서울시의 등급 관련 세부내용을 요청했지만 권익위는 이를 거부했다.

권익위는 “부패방지 시책평가 세부 보고서는 해당 기관에 전달됐다. 보고서 공개 여부는 해당 기관이 결정할 사항”이라며 공을 서

울시에 넘겼다.

서울시에 보고서 공개를 요청했지만 시 역시 거부했다. 부족했던 점을 스스로 노출하기는 어렵다는 게 시의 입장으로 풀이된다. 시 관계자는 “빠져서 반성하고 개선하려 하고 있다. 무엇을 놓쳤는지, 그리고 올해는 어떻게 할지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다”며 “사실 서울시가 높은 차원에서 부패방지 정책을 펴고 있는데 실무적인 차원에서 일부 세부적인 것을 놓친 게 있어서 이렇게 됐다”고 해명했다.

결국 뉴스는 이날 1일 권익위와 서울시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뉴스는 정보공개 청구서에서 “서울시는 2년 연속 4등급이라는 저조한 평가를 받았으므로 시민과 언론은 서울시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는지 알아보고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권익위와 서울시는 잇따라 비공개 결정통지서를 보내왔다.

권익위는 14일 보낸 통지서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국민권익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별표 2)’ 위원회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에 따르면 각종 연구용역의 중간단계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민에게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귀하께서 요청하신 ‘2018년도 서울특별시 부패방지 시책평가 세부평점’은 부패방지 시책평가 최종 결과 도출을 위한 중간단계 값으로 위 정보공개법이 정하는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해당돼 비공개대상 정보에 포함된다”고 비공개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권익위가 지난달 부패방지 시책평가 등급을 대대적으로 발표하고도 세부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입장을 밝힌 셈이다. 권익위는 “세부 항목은 (시민과 언론이 아닌) 해당 기관에만 제공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서울시 역시 20일 통지서에서 “2018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비공개적으로 보내준 자료로서 내부적으로 검토 및 분석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할 수 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시민사회는 권익위와 서울시의 행태를 비판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관계자는 “딱 등급만 내놓는 게 아니라 어떤 평가를 왜 받았는지 알려주는 것이 투명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세부 결과가 나와야 국민이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다”며 “투명성을 높여야 외부 감시와 감독이 가능하다. 결과만이 아니라 세부내용을 납득할 수 있게 공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권익위의 주요 정보 비공개 행태가 습관적이라며 이를 대대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권익위는 지난해 연말 ‘공공기관 해외출장 실적점검 후속조치 이행결과’를 발표할 당시에도 피감기관 지원을 받은 국회의원 명단과 세부내역을 비공개한 바 있다.

경제정의실천연합 관계자는 “국회의원 해외출장진 때도 권익위가 명단을 공개하지 않아서 결국 기관별로 정보공개를 청구해서 문제가 된 의원들 명단을 받아내는 등 답답한 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권익위의 이 같은 행보에 대해선 공공기관들도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심지어 권익위가 연례적으로 추진하는 각종 평가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된다.

뉴스

서울시, ‘미세먼지 원인’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걷는다

서울시는 경유차량에 부과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의 올해 1기분을 다음달 중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주요 오염원인 경유 자동차에 환경개선 비용을 부과해 자발적인 환경오염 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1992년 도입됐다.

징수된 부담금은 대기·수질 환경 개선사업, 저공해기술 개발연구, 자연환경 보전사업 등에 쓰인다. 부과금액은 차량 노후정도와 자동차 등록 지역, 배기량에 따라 산출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연 2회(3월, 9월) 부과된다. 연납(일시납부) 신청 후 납

기 내에 1~2기분을 모두 납부하면 납부액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보유한 자동차는 1대까지

연납신청 희망자는 다음달 22일까지 전화 120번으로 신청하거나 차량이 등록된 자치구 환경과로 방문·유선 신청하면 된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창구는 이

경유차량 소유자 대상 2019년 환경개선부담금 1기분 부과 3월22일까지 일시납부신청 후 31일까지 납부시 10% 감면

환경개선부담금이 감면된다. 저공해 자동차 유로 5~6등급 경유차는 부과 면제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자동차도 3년간 부과가 면제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희망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02-1544-0907)로 문의하면 된다.

텍스(etax.seoul.go.kr), 서울시세금납부액, 은행 현금인출기, 전용계좌, ARS(1599-3900),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등이다. 납부기한 내 미납시 3% 가산금이 부과된다.

뉴스

서대문형무소 3·1운동 수감자 자료집 발간

1014명 분석

3·1운동의 주인공들을 기억하고 기록할 수 있는 자료집이 발간된다.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3·1운동으로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됐던 독립운동가들의 수형기록카드(일제 감시대상 인물카드)를 집대성한 1300여 쪽 분량의 자료집을 25일 발간한다.

21일 구에 따르면 1919년 서대문형무소에는 약 3070여명이 수감됐다. 이 가운데 수형기록카드가 남아있는 1014명에 대한 기록을 확인하고 미기록 부분은 판결문 등 자료를 찾아 보완해 자료집이 완성됐다.

3·1운동 수감자만을 대상으로 단독 자료집을 발간하는 것은 첫 사례라고 구는 설명했다.

이번 자료집을 통해 3·1운동기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됐던 독립운동가들의 연령분포와 직업, 죄명, 형량 등이 밝혀졌다. 연령은 20대

가 39.3%로 가장 많았다. 30대(22.7%), 40대(15.1%), 10대(12.8%), 50대(7.3%), 60대(2.8%) 등이 뒤를 이었다.

직업은 기재된 77명 가운데 농업이 54.6%로 가장 많았고 학생, 종교인 교사가 26.4%였다. 33명의 여성 독립운동가를 포함해 상인, 공장 노동자, 제조업자, 의사, 간호사, 마차꾼, 고물상, 면장, 면서기, 순사보 등 80여 종류의 직업이 확인됐다.

죄명은 대부분인 92.6%가 보안법 위반이었다. 나머지는 소요, 출판법 위반, 정치에 관한 죄 등 모두 소위 자살범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량도 가벌지 않았다. 형량이 파악되는 929명 가운데 최대 형량은 12년 형으로 4명이었다.

이번 자료집은 민족대표 33인 중 28명, 배후여학교 3·1운동 1주년 투쟁의 주역인 학생 24명 등 같은 지역에서 3·1운동을 펼친 수감된 이들을 분류해 수록했다. 북한지역에서 3·1운동을 전개



하다 체포돼 서대문형무소에 갇힌 북한 출신 수감자 230여명도 확인됐다. 황해도 수안군 수안면에서는 3·1운동 참여자 중 60여명의 카드가 그대로 남아있다.

1014명에 대한 공훈여부도 조사했다. 66.3%인 672명은 독립유공자로 서훈 받았지만 33.7%인 342명은 포상을 받지 못했다.

자료집은 26일부터 관련 연구기관과 전국 도서관 등에 배포된다.

지난해 경기북부 외국인 범죄자 1650명...마약사범 급증

지난해 경기북부지역에서 범죄를 저질러 검거된 외국인이 1650명을 기록해 전년에 비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같은 수치는 검거된 외국인 범죄자를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실제 발생건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21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북부에서 살인과 강

도 강간, 추행, 절도, 폭력 등으로 검거된 외국인은 1650명에 이른다. 이중 64명이 구속되고 1586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범죄 혐의별로는 살인이 2명, 강도 2명, 강간·추행이 23건, 절도 139건, 폭력 426명, 지능범죄 230명, 마약류 38명, 기타 792명이다.

이는 전년에 비해 다소 감소한 수치로, 2017년에는 살인 2명, 강

간·추행 39명, 절도 126명 등 외국인 범죄자 1777명이 검거돼 67명이 구속됐다.

가장 외국인 범죄자 검거가 많았던 시기는 2016년으로 2121명이 검거돼 104명이 구속됐다.

2016년에는 살인 8명, 강도 3명, 강간·추행 42명, 절도 126명, 폭력 48명, 지능범죄 258명이 검거된 바 있다.

완도군



완도군 공식 농·수산물 쇼핑몰

완도군 특산품관

WANDO COUNTY

전국제일의청정바다에서 생산된 전복, 김, 미역, 멸치, 다시마 등 자연 그대로의 맛과 신선함!

